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1996. 3.

申 相 振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目 次 -

I. 問題提起	1
II. 中國의 對內政策 展望	2
1. 政治的 統制 強化	2
2. 安定的 經濟發展 推進	5
3. 主權 守護를 위한 軍事力 培養	8
III. 中國의 對臺灣政策 展望	11
1. 對臺灣 武力示威 背景	11
가. 對內 政治的 背景	11
나. 對外的 背景	13
2. 中國의 對臺灣 武力侵攻 可能性	14
3. 臺灣海峽 緊張이 韓半島에 미칠 影響	16
IV. 韓國의 考慮事項	19

I. 問題提起

○중국은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8기 全人大 4차회의)를 개최(3. 5-17)하여 1996년도 국정방향 및 9차 5개년 계획안과 2010년 장기 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음.¹⁾

○금번 중국의 全人大는 2010년까지 중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가능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회의일 뿐만 아니라 중·대만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세를 전망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중국은 지난 18년 동안의 경제발전 결과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한반도에 대해서도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강대국인바,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는 동아시아 질서변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와 관련, 본 보고서는 금번 全人大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1996년 중국의 정치·경제·군사 정책 및 對대만 정책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이번 全人大에서 발표된 李鵬 총리의 보고문 전문은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計劃和二〇一〇年遠景目標綱要的報告,” 「文匯報」, 1996年 3月 6日, pp. A6-A7 참조.

II. 中國의 對內政策 展望

1. 政治的 統制 強化

○1992년 14차 당대회 이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도입 등 개혁·개방정책 가속화로 중국사회가 다원화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음.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권과 대외무역권 등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었음.

- 또한 중국 공산당은 공장장 책임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권을 비공산당원의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는 등 기업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여 왔음.²⁾

- 이러한 권력하방 조치 결과 지방정부들이 北京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³⁾

2) 이는 국유기업의 경영효율 개선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내 공산당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음.

3) 1995년 8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姜春雲의 부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36%에 이르는 대표들이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았는 바, 이는 당중앙의 의사가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임. 村山 義久, “中國を揺るかす中央と地方の對立,” 「世界週報」, 1995년 5월 2일, p. 6.

○지난 18년 동안의 개혁정책으로 중국은 물질적으로는 급속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급진 성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범죄가 만연되고 있음.

- 중국 관리들이 각종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도모하고 군·경찰 간부들이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밀수행위에 가담하는 등 공직자 부정부패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⁴⁾

- 중국은 이러한 사회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부패·뇌물충국」을 신설(1995. 11)하였으며, 간부 직권남용 감시제도, 공무원 소득·재산 신고제 및 예금 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중국 국민들은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물질적 부의 축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음.

- 특히 건국 이래 중국 공산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청년들의 입당율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며,⁵⁾ 심지어 농촌지역의 민간조직이 당의 권위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국은 금번 全人大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

4) 중국 공산당은 1995년 9월 부정부패 혐의로 북경시장 陣希同을 정치국원직에서 박탈시킨 바 있음.
5) 농촌지역 청년들의 입당율 저하 원인의 하나로서는 농촌 청년들의 도시지역으로의 무작정 상경에서 찾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패를 타파함으로써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은 1994년 9월 14기 4중전회 이래 중앙에 대한 지방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여 왔으며, 1996년에 들어서는 「정치 중시」 입장을 보다 강도 높게 역설하고 있음.⁶⁾
- 중국은 이번 全人大 시정보고문을 통해서도 「精神文明」을 강화하도록 역설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중국은 앞으로 공산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사정작업을 계속 강도 높게 전개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공산주의의 대체이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안정과 단결을 모색해 나갈 것임.

- 중국은 최근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 사랑이라는 소위 「5愛運動」을 통해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부패척결을 14기 6중전회(가을 개최 예정)의 의제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정치·사회적 과도기에 편승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全人大 기능

6) 중국은 1996년 1월 17일 江澤民이 14기 5중전회에서 발표한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人民日報」에 재차 게재하는 등 정치 중시 입장을 밝히고 있음. 江澤民, “領導幹部一定要講政治,” 「人民日報」, 1996年 1月 17日.

의 강화를 통해 「社會主義 民主化」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임.

- 중국은 全人大 상무위 18차회의시(2. 28) 「계엄법」을 통과시켜 국가의 통일·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소요사태 발생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음.⁷⁾
- 중국은 新疆과 西藏지역 등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들의 불만이 제도권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수민족의 全人大 대표비율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행정처벌법」 제정 등 사회주의 법제건설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⁸⁾

2. 安定的 經濟發展 推進

○제8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동안 연평균 12%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신장되었으나, 고도 성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연평균 11.4%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지역간·계층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중국이 급진 성장정책을 채택함

7) 새로 제정된 중국의 계엄법 전문은 “中華人民共和國戒嚴法,” 「人民日報」, 1996年 3月 2日 참조.

8) 이번 전인대에서 기존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를 임의로 구금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피의자의 변호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행정처벌법」이 제정되어 공직자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사정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음. “China’s Parliament Widens Defendants’ Righ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6.

으로써 1989년 이래 안정세를 보여왔던 소비자 물가가 1993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상대적 경제박탈감에 빠져있는 지식인과 도시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음.

- 1995년에 들어서는 과열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10.2%의 성장율과 14.8%에 달하는 물가상승율을 기록하였음.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계층간 경제격차 확대는 중국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내륙지역의 농민을 소외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자극하고, 농촌지역에서 집단 시위와 소요사태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이번 全人大의 주요 의제를 당면 경제문제 해결에 두었으며, 2000년까지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룩한 개혁의 성과를 내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음.

- 중국은 2000년까지 연평균 8%(8차 5개년계획 시기 연평균 성장율은 12%)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총생산 규모를 1980년 대비 4배 증대시키며 2010년에는 이를 다시 2배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중국은 이와 같은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10년까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21세기 중반 경제선진국 진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은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의 거시통제 능력을 강화하면서 국유기업 개혁과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정책을 단행할 것임.

○ 현재 국가가 경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상태에 처해 있어서 중국의 재정적자를 누적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⁹⁾ 향후 중국은 1000개의 주요 대기업만을 국가가 관장하고 나머지 경영부실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은 점차 민간과 외국기업에 이양하게 될 것임.

- 국유기업 개혁진전에 따라 기존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인 바, 중국은 양로, 실업, 의료, 주거 보험제도 개혁 등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 도입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임.¹⁰⁾

○ 또한 중국은 내륙 농촌지역과 동남부 도시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시켜 중국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

- 중국은 新疆과 西藏 등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조치를 통해 소수민족의 불만소지를 해소시키는 데에도 정책의 중

9) 1994년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중 채무 의존도가 21%에 달하여 위험수위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1994년부터 2년 단위의 財稅體制를 도입하였으며, 「분세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다소 호전 추세(1994년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이 55.75%에서 1995년에는 56.55%로 증가됨)를 보이고 있음. 吳程, “壓軸赤字:振興財政第一步,” 「文匯報」, 1996年 2月 25日.

10)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사회보장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점을 들 것임.

○ 이번 全人大에서 2010년까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정착시키고 국제경제체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국 통일의 대외경제무역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는 바, 중국은 대외무역체제 개혁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임.

- 5개 특구와 上海 浦東지구에 대한 경제 특혜정책이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구에 대한 기존의 특혜정책을 점차 축소시켜 나갈 것임.

- 외국인에게 투자를 제한했던 상업, 금융, 증권분야 개방 및 인민폐의 자유 태환화 추진 등을 통해 국제경제체제 편입을 모색할 것임.

3. 主權 守護를 위한 軍事力 培養

○ 중국은 1989년 天安門사건과 1991년 걸프전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 들어 군사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군사 현대화 작업을 적극화하고, 기존의 영토보존의 소극적 방어전략을 대양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이와 같이 중국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만과 홍콩의 주권 회복과 1992년 「영해법」 제정을 통해서도 천명된 바 있는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자국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이번 全人大에서 군사력 증강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였음.¹¹⁾

- 중국의 무기·장비가 미국 등 군사강대국에 비해 질적으로 훨씬 낙후되어 있는 바, 향후 중국은 군사무기·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군사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것임.

- 중국군은 최근 군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고가 무기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장비 현대화에 주력할 것임.

- 또한 중국은 1995년 12월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협력협정」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기와 S-300형 지대지 미사일 등 첨단무기 구매정책도 병행해 나갈 것임.¹²⁾

○ 중국은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군부가 체제안정 유지세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군사예산 증액을 통해 군간부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

11) 중국은 전인대 개최 기간동안 당기관지 「人民日報」를 통하여 적극방어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李衛星, “加強國防建設是國家安全與經濟發展的基本保證,” 「人民日報」, 1996年 3月 7日.

12) 수호이 27 전투기의 구매문제가 1996년 4월 엘친의 중국방문시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Steven Mufson, “Russia-China Ties Warm, In a Cool Kind of W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2, 1996.

고 군간부의 당고위직 임용 비율을 확대시킬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은 1994년 이래 「政治合格, 軍事過硬, 作風優良, 紀律嚴明, 保障有力」이라는 구호를 통해 군부가 당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도록 요구해 왔음.¹³⁾

- 군간부들이 당 중앙위원회 등 정책결정 기구에 대거 발탁될 경우, 이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

13) 이는 군대가 당중앙의 정치노선을 따르며, 강력한 힘을 기르며,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안전하게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임 「人民日報」, 1995年 11月 26日.

Ⅲ. 中國의 對臺灣政策 展望

1. 對臺灣 武力示威 背景

-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3.23)를 앞두고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훈련(3.8-15), 해공군 합동 실탄훈련(3.12-20) 및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3.18-25)을 단행하여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배경요인으로서는 중국의 대내 정치적 상황과 동아시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간 대립을 들 수 있음.

가. 對內 政治的 背景

- 중국은 현재 지도부 교체라는 정치적 과도기에 처해 있어서 臺灣문제와 南沙群島문제 등 주권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江澤民은 군 지도부 인사 단행과 일선 군부대 시찰을 통해 군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나 江澤民의 군부 장악력은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음.
 - 江澤民 체제의 취약성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
-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鄧小平 사후에 전개될 수 있

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경쟁자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문제 등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음.

-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민족주의자이며 애국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군부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의 현지도부는 대만통일 등 국가주권 문제를 대내 안정유지와 단결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화됨으로써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공산주의의 대체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¹⁴⁾ 대만주권 수호를 국민통합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 1995년에도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부각시킴으로써 내부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음.¹⁵⁾
- 중국은 天安門광장에 홍콩주권 반환 일시를 예고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중국 국민들을 통합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음.

○ 경제발전에 따라 정치민주화 요구 등 체제불안 요인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대만에서 총통직선을 통해 민주화가 진척되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음.

- 대만의 민주화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민주화 운동과 新疆과

14) 姚眉平, 楊柏榕, “論鄧小平愛國主義思想的基本特點,” 「求是」, 1995年 第22期 (1995. 11. 16), pp. 20-25.

15) 未羊, “注意日本的動向,” 「瞭望」, 1995年 第26期 (1995. 6. 26), pp. 54-55.

西藏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대만의 민주화가 중국내 민주화와 소수민족 분리독립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분석됨.

나. 對外的 背景

○李登輝 대만 총통은 1992년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1995년 6월에는 미국을 방문하고 유엔가입을 시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李登輝 총통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정치적 지위하에서만 통일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모색해 왔음.

○중국은 李登輝 총통의 정책노선을 「明統暗獨」(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추구)으로 간주하고, 이번 총통선거에서 李登輝 현총통의 지지율을 하락시킴으로써 정통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음.¹⁶⁾

○또한 중국은 대만이 국제무대 진출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차제에 미국의

16) “在京看軍事演習公告,” 「文匯報」, 1996年 3月 6日.

간접적인 대만독립 지원정책을 차단시키려 하였음.¹⁷⁾

- 중국은 소련붕괴 이후 미국이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하여 대중 견제·봉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의 긴장을 유도하여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中國威脅論」을 확산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국과 중국간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의 분리독립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음.

2. 中國의 對臺灣 武力侵攻 可能性

○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국 內政問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대외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거나 외부세력이 대만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도 불사할 것임.¹⁸⁾

○ 그러나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상황 및 대만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분간 중국은 대만본토에 대해 무력공격을 감행하기 보다 대만내 독립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제한적인 군사위

17) 閻學通, 「美對臺政策和臺灣海峽緊張局勢」, 『瞭望』, 1996年 第10期 (1996. 3. 4), p. 42.

18) 중국은 줄곧 대만의 독립 선포와 외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대대만 무력공격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 왔음. 『人民日報』, 1992年 12月 16日, 1995年 7月 21日, 1996年 3月 12日 등 참조. 그러나 홍콩의 일부 언론은 대만과 러시아의 동맹, 대만내 정치불안, 대만의 고의적인 통일협상 지연책 등도 중국의 對대만 무력공격 유발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6, 1993, pp. 19-20.

협을 가하게 될 것임.

- 이번 對대만 군사위협 행사시에도 중국은 군사훈련 지역을 중국 영해내에 국한시켰으며, 중국의 군사훈련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¹⁹⁾

○중국은 이번 全人大에서 통과된 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 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1세기 중반까지 선진경제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고 있는 바,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자제할 것임.

- 중국과 대만의 해·공군력과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만본토 침공에는 막대한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 및 대만 자본의 투자를 어렵게 하여 중국경제 발전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임.

- 중국의 對대만 침공은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중국위협론」을 확산시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

- 1997년 7월 홍콩 주권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해서도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대만문제 해결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대만의 李登輝 총통도 차기 총통 당선이후 무리하게 국제무대 진출을 서두르기 보다는 내부 정치발전과 사회·경제 안정 회복을 위해

19) 李鵬, 앞의 보고서; 錢其琛, “就國際形勢和我國外交政策錢其琛答中外記者問,” 「人民日報」, 1996年 3月 12日.

중국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대만은 기존의 對中 「三不政策」을 포기하고 「三通」을 추진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긴장상황을 완화시키고 1997년 홍콩의 중국귀속 이후에 대비하려 할 것임.

○미국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포괄적 개입정책을 지속할 것임.

- 미국은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미국은 대만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

3. 臺灣海峽 緊張이 韓半島에 미칠 影響

○중·대만간 군사적 긴장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인권문제와 지적재산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중·미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임.

-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中國威脅論」을 더욱 강도 높게 역설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화하게 될 것임.
- 미국은 북한을 對中 견제·봉쇄전략 추진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임.

- 미국이 대북관계 개선을 對中 견제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이완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화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회복·강화시킬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임.
- 중국과 북한간 결속력이 다시 강화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해질 것임.
-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인 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정치·군사 영향력 증대 기도를 용인하게 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일본이 한반도 조기 통일에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이 대만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오관하여 대남 무력도발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음.
- 북한은 내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내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음.
- 대만해협 사태는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고취시켜 지역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는 남북한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남북한의 경제발전 회복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IV. 韓國의 考慮事項

- 중국내 정치상황과 중·대만간 군사긴장이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대중정책 추진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첫째, 한국은 對中 관계개선을 위해 대미·일 동맹관계를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이번 대만해협 사건을 통해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국들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서 지역안정 및 국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 둘째,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바, 한국은 중국 군지도부와의 접촉을 모색·강화해야 할 것임.
 - 중국 군부와의 교류·접촉 확대는 한·중간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모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셋째, 한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내 朝鮮族에 대한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朝鮮族에 대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한·중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넷째, 중국문제와 한반도문제가 동북아질서에 가장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한국은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역내질서의 안정을 유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統一情勢分析 96-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9252,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3월 일

發行日 1996년 3월 일
